

‘1조 지원’ 방침에 전남 기초지자체 응답할까

●군공항이전 지역 지원 어떻게

기존 4천508억원 외 부족분 市사업 절감 통해 마련
姜시장 “최소 이정도 하겠다는 것” 추가 검토 시사
“군공항 유치의향서 제출 즉시 민간공항 이전 논의”

광주시가 군공항 유치 지역에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전남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가 28일 내놓은 지원 방안은 기부 대안 여 방식에 따른 차액으로 마련할 지원 사업비 4천508억원에 광주시 자체 재원을 더해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군공항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야 본격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먼저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은 전남지역 내 군공항 이전 반대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5월10일 현장 의견을 청취해 이전 대상지 지원사업을 발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광주시의 발표는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 좋겠다는 전남도의 의사를 반영하는 수준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사전 협의나 논의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발표문에 대해 “특정 지역 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남 22개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할 만한 지원 사업”이라며 “각 시·군마다 맞춰 발표하기는 어렵다. 지원 방안은 향후에 얼마

든지 조율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전지역)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시가) 최소 이 정도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당초 이전 희망지 의견을 들어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맞춤형 사업들을 얘기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광주시가 먼저 공통 사항들만 반영한 것”이라며 “(이전 희망지의) 의견이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1조원 지원과 관련, 기존 4천508억원 외 나머지 지원 마련 방안에 대해 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정부 용자를 받게 돼 사업 추진 과정에 일반 회사체를 쓰는 것보다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광주시의 사업 절감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항 이전 추진 시점이 광주시의 대규모 예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릴 것으로 예상돼 일시적 지원이 아닌 연간 단계적 지원의 경우 지원 예산 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TK특별법”에 적용된 이주 정착 지원금과 관련, 강 시장은 “광주 군공항 특별법에서는 빠져 있다”며 “이전 지역이 확정되면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특별법 개정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구수, 가구수

책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비용 책정이 어렵다는 게 강 시장의 부연이다. 무엇보다 민간공항 이전에 대해 강 시장은 “군공항 유치 의향서가 제출되면 즉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오늘 발표는 군공항 유치 지역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천명하는 의미도 있다”며 “이전 지역이 어느 곳이나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당연히 커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강 기자

金지사, 무안 군공항 반대 여론 달래기 주력

도청 앞 농성장 찾아 범대위 관계자 면담
“광주 대면 아닌 무안 위한 일” 협조 당부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지역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28일 오전 도청 앞 ‘광주 전후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전막 농성장을 찾아 송남수 범대위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15분 가량 면담했다. 김 지사는 범대위 관계자들과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공항 통합 이전을 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송남수 위원장은 김 지사에게 “(공

항 문제와 관련) 지사는 왜 무안군민을 대면하지 않고 광주시를 대면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무안군이 잘되고, 일이 잘 진행되도록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지사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 우려에 대해 “소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군공항 이전으로 무안군이 얻어낼 것이 10개, 20개 되도록 지사로서 노력하는 것”이라며 무안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면담이 끝난 뒤 “고생하신다”며 범대위 관계자들과 악수했고 일부 관계자는 지사와 악수를 거부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영록 지사가 성심성의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군민을 직접 만나고 꾸준히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道, 내일 ‘군공항 이전 바로 알기’ 도민 강연회

이전 반대 범대위 초청 ‘대화의 장’ 기대

전남도는 28일 오후 2시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군공항 이전 바로 알기 도민 강연회’를 개최한다. 특히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 대화의 장이 마련될 지 관심을 모은다. 정기영 세한대학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무안 국제공항 통합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2시간여 동안 강연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회는 이날 8일 열린 1차 강연회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 내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도에서 직접 나서야 된다”는 무안군민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무안군과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에 강연회 개최 계획을 알리고 참여를 요청, 군공항 이전 반대 주민들과 본격적인 대화의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민 간 갈등의 골이 커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이 신속하게 해결돼야 한다”며 “향후 공식 논의의 장에서 서남권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화가 이뤄지도록 앞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융복합의료산업 도약 발판

산업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선정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28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지역의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융복합의료산업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은 전남·광주·충남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3년간 국비 55억원을 포함한 153억원이 투입되며 전남은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약연구센터와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의약 및 의료소재 공정 개발 장비를 확충하고 기술지도, 공정개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공인인증시험과 인허가를 담당한다. 또 전남대 생체재료개발센터,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병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협력해 전임상·임상을 포함한 실증 플랫폼을 지원한다. 사업 선정에 따라 전남·광주·충남 의료제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공모를 통해 수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정 기자

Panasonic

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88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REAL PRO
MAK1

**보상은 크게!
가치는 오래!**

쓰시던 안마의자를 바꾸세요

1년에 한번 뿐인 특별한 보상기회를 잡으세요

지금 쓰시던 안마의자를 교체하시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 US여자오픈 우승
이정은4 프로

2011 US여자오픈 우승
2017 ANA인스퍼레이션 우승
유소연 프로

파나소닉 안마의자 보상판매

- 기 간 : 2023.06.23 ~ 2023.07.31
- 행사내용 : 사용중인 안마의자 교체 시(타사제품 포함) 파나소닉 안마의자 MAK1·MAF1·MA32·MAC9·MA05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MAF1 MA32 MAC9 MA05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